

전남도, 식품산업 연 매출 '3조 시대' 시동

제조·미래식품산업 육성 29개 사업 442억 지원 의약품 수준 기능성 식품·가정간편식 개발 예정

전남도는 지역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통해 식품산업 연간 매출액 3조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올 한해 29개 사업에 4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상품 개발 및 품질관리 강화 분야에 ▲시제품 및 포장지 제작 7억 원 ▲자 가품질 검사비 2억7,000만 원 ▲유기가공

식품 인증비 2억 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2억 원 ▲식품산업연구센터 4억 원 등 18억 원을 지원한다. 자동화설비 등 식품산업 기반 확충 분야는 ▲농식품 제조·가공지원 30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13억 원 ▲전통식품 산업화 13억 원 등 56억 원을 투자한다. 농산물 생산과 가공, 체험관광을 포괄

하는 농촌융복합산업화 분야에는 ▲향토 산업육성 24억 원 ▲농촌융복합 지구조성 28억 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센터 운영 13억 원 ▲융복합 강화 6억 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6억 원 등에 79억 원을 투입한다.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재료 구입비 12억 원 ▲김치 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 9억 원 ▲중

군발효 식품산업 지원 1억 원 등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능성 미래식품 개발 분야에는 ▲가정 간편식 제품 개발 및 인프라 구축 10억 원 ▲기능성 HMR실증·실용화센터 구축 196억 원 등을 쏟아부었다. 이와 함께 담양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신안 땅콩가공센터 건립 등 지역 맞춤형 식품산업 분야에 36억 원, 어르신 체험

활동 건강꾸러미 25억 원을 쓴다. 전남도는 올해 290억 원 규모 김치 원료 공급단지 유치와 함께 담도음식의 기록보전과 세계화를 위한 국립남도음식진흥원 건립 등의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약품 수준의 기능성 식품과 가정간편식 등 미래식품부터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웰스케어 상품까지 개발할 것"이라며 "올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설비와 HACCP 시설 구축, 판촉 지원 등을 지원해 식품업체 매출액 3조원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강인규 나주시장 3선 도전 '빨간불'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아들·측근인사 구속 지역사회 여론 악화...민주당 경선 최대 고비

강인규 나주시장의 3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캠프서 핵심 역할을 했던 강 시장의 아들과 최측근 인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동시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최근 나주교동 보조금 비리,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등 강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역 여론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지법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의 아들 A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의 최측근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A씨는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불법협의를, B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에 선 선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 캠프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이들은 지난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불거진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이미 6명이 구속돼 재판과 받고 있거나 일부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가운데는 나주시의원을 거친 뒤 강 시장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C씨도 포함돼 있다. 잇단 비위사건으로 강 시장 주변인물 등이 구속되면서 지역사회는 비난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청에서 별정직이나 정부직으로 일했던 측근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나주시정 안팎은 침뿜힌 분위기다. 이로 인해 당장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강 시장의 출마여부에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나주시의회 의장을 거쳐 재선의

나주시장을 역임하고 있는 강 시장은 그동안 3선 도전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가족과 측근의 잇단 구속은 3선 도전에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강 시장은 아들 비위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최대 고비인 민주당의 당내 경선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지역 정가 관계자는 "강인규 시장이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최근 각종 잡음이 새어나오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며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최근 불거진 비위사건이 강시장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나주시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행정관료와 정치인, 언론인 출신 등 자전타전 10여명이 넘는다. 후보군이 난립하면서 선거가 과열 조짐이 일자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지방선거 지원단을 구성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경남 하동군) 시장·군수·의장이 6일 오후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섬진강 수해 48% 배상 납득 못 해”

8개 지역 단체장 규탄 성명

섬진강댐 하류 8개 시·군 단체장들이 섬진강 수해 환경분쟁조정 결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은 6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같은 시기에 수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의 배상 범위는 72%로 결정된 반면 섬진강댐 하류는 48%로 한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대책 회의에는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경남 하동군의 각 시장·군수와 시·군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지난 2020년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섬진

강 하류 8개 시·군 주민 6,013명이 최소 2,983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봤다. 수재민과 단체장들은 환경부 소속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인 이유 없이 하천 유역별로 다른 배상 범위를 결정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배상을 결정했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섬진강댐 하류에 24%포인트나 낮은 배상 비율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위는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 비율이 다른 객관적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사유를 밝힐 수 없다면 모든 피해 지역에 최고 비율로, 동일하게 배상 비율

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말 섬진강 하류 신장인 일부에게 전문 손해 사정인을 통해 신청한 피해 금액 대비 48%를 지급 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댐 관리 및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족,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이유로 홍수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한편, 수재민들로 구성된 섬진강 수해 참사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정 결정의 즉각 철회와 재조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학대란?

- 장애인을 때릴 때
-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조사를 합니다.
-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 실라 거주 사법 복지
-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선 D-60...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지자체장 행사 개최·후원 제한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도를 높여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당·정책과 주·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다만, 정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광주·전남선거위는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선우 기자

도,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17일까지 모집

전남도는 도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인권 증진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당 5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 중인 도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 및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오는 14일까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 확인 후 전남도인권센터(061-286-2394·bony1234@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서서 인권센터가 신청서류에 대한 자체평가 후, 2차 심사서서 전라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단체·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김용현 기자